

[관공서 및 대기업 등 사칭 피싱범죄 예방 안내문]

공무원 또는 대기업, 군경 등 사칭 보이스피싱은 실제 기관이나 공무원 명의를 도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. 공무원은 전화·문자·이메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,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확인하고 경찰(112)이나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□ 주요 사례

- 가짜 명함·공문서 활용: 농업기술센터나 지자체를 사칭해 물품 납품 계약을 가장하고 선입금을 요구.
- 위조 명함 문자 발송: 합천군 사례처럼 공무원 명함을 위조해 업체에 신뢰를 얻은 뒤 금품을 요구.
- 물품 대납 요구: 강원도 사례에서 도청 간부를 사칭해 특정 업체 자재 발주를 요청하며 비용 대납을 요구.
- 시청 공무원 사칭: 광양시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.

□ 예방 방법

- 공무원은 금전 요구 없음: 전화·문자·이메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% 사기.
- 공식 연락처 확인: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기관 대표번호나 공식 부서로 사실 여부 확인.
- 즉시 신고: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(112)·금융감독원(1332)에 즉시 신고.
- 정보 공유: 지역 단체·업체와 사례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예방.
- 교육 참여: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참여해 최신 수법을 숙지.

□ 유의할 점

- 피해 대상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음: 연령·직업 불문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.
-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 가능: 위조된 공문서·명함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높음.
-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주의 필요: 어르신·소상공인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함.

■ 정리

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“공무원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”는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.

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공식 기관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